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정부는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안전사고 예방,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세월호의 비극을 새삼 떠올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 대구 지하철 참사 등으로 대형 화재와 수해 등으로 인한 지울 수 없는 상흔(傷痕)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오늘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안전'의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의 사용을 비롯해 각종 식품·의약품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전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구와 생명의 지속 가능한 존립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생명의 종 다양성 파괴 등의 문제마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안전'은 국가와 공동체를 넘어 전(全) 인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국가는 사회적 재난 뿐 아니라 자연재해 등 모든 위험요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기본적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책무는 법제도 안에서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 또한 재난과 참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할 국가의 책무가 점차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통합 재난관리체계를 통한 현장 즉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각종 참사의 예방과 후속 절차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고, 국제적으로는 공감과 협력에 기반하여 국제협약 등에 가입함과 동시에 실효적인 이행 수단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여러 해 전부터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인프라 및 법제 마련의 일환으로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여러 연구를 진척시켜 왔습니다.



이번 법연의 특집이슈를 ‘안전사회 구축’으로 선정한 까닭 또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여러 해 전부터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인프라 및 법제 마련의 일환으로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여러 연구를 진척시켜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국내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지하철반사고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하공간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호에 소개된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규제 체계에 관한 법제연구’는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각계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안전 법제 구축이 보다 실효성 높은 제도의 구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법은 사회 변화를 주도하기보다 수동적 경향이 있기에 한국법제연구원은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쟁점을 선제 발굴하여 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세 도입 여부와 관련된 논의나 신성장 분야 발전을 모색하려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 개선 등 다양한 법정정책 제언들을 이번 법연에 담았습니다.

한편 이번 법연에서는 우리법의 세계화를 위한 한국법제연구원 법제 교류 성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국법제연구원은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초청으로 Tashkent Law Spring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입법 관련 경험을 우즈베키스탄의 정부관료 및 학계 등 전문가와 공유하고 우리법제의 우수성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법연에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5월 29일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평화 프로세스의 법적 제도화’를 주제로 영미권 한국법연구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K-Law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역동적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 확립과 확산의 일환으로 법제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앞으로도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우리 사회의 변화와 필요에 보다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동시에 국제 경쟁력 또한 제고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 격려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